

금융브리프 논단

2025년 경제전망과 정책시사점

박춘성 연구위원 | 02-3705-6261

요약

- ▶ 우리 경제는 2024년 2.2%에서 2025년 2.0%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2.4%, 2025년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2025년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 ▶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 물가안정 기조하에서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에 보다 중점을 두고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금융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할 것임.
- ▶ 재정정책은 건전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점검,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 집행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가 내부적으로는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금융,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장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24년 2.2%에서 2025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25년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세는 둔화할 전망이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대외여건을 평가하고 2025년 경제전망 및 정책시사점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외여건 : 세계 경제의 회복과 불확실성의 확대

IMF는 지난 10월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024년과 동일한 3.2%로 전망하고, 세계경제가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면서도 회복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5.8%에서 2025년 4.3%로 완만히 하락하는 등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세계무역 증가율은 2024년 3.1%에서 2025년 3.4%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통해서만 평가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25년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대외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IMF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만일 2025년 중반부터 주요국 상호간 무역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세계 GDP와 교역량이 2026년까지 각각 0.3%, 4%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2025년에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집행 시기, 강도, 혹은 여타 국가와의 협상 과정 등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그 영향을 엄밀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하방 위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위 IMF의 분석처럼 미국의 관세인상, 통상압력 강화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세계경제와 교역에 대한 강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미국의 법인세 감면, 이민 축소, 확장적 재정정책 등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금리 하락 기조를 제약하고 달러화 강세 지속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즉,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 금리인하 사이클이 제약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국내 거시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2024년 2.2%, 2025년 2.0%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5년에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이 둔화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실질 GDP를 지출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4년 1.3%에서 2025년 2.0%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2024년 중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가 지속되며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특히, 2024년 3분기 증가율은 전기대비 0.5%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 연간 성장세를 평가하면 1.3%에 불과하다. 2025년에는 금리 인하 및 인플레이션의 점진적인 하락에 따라 소비 여건이 개선되며 연중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까지도 가구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민간소비의 개선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4년 -2.3%에서 2025년 -2.7%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부문은 2022년 중반부터의 부동산 PF 부실화,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으로 수주, 허가, 착공 등 주요 선행 지표가 최근까지 지속해서 악화된 바 있다. 예정된 건설 규모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의 SOC 투자도 3.6% 감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건설투자에 대한 기여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24년 1.1%에서 2025년 3.8%로 상승할 전망이다. 제조 기업들은 유가, 원자재가격 등 생산비용 증가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을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꼽아왔는데,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설비투자 전망 BSI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 전망 등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설비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2024년 각각 7.2%, 2.8%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총수출 증가율이 2.3%로 감소하고 총수입 증가율은 3.4%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와 더불어 양호한 세계 교역량 등에 따라 2024년 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025년에는 상반기 중 정점을 보인 후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설비투자 증가와 더불어 최근 부진

했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 수요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며 2025년 중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상수지는 2024년 793억 달러, 2025년 680억 달러로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2025년 중 내수 회복세가 완만함에 따라 수요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4년 초 물가를 견인했던 농산물 가격 등의 공급요인 영향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달러화 강세 가능성 등은 2025년 소비자물가의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2024년 3.1%에서 2025년 2.8%로 하락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안정과 내수 부진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개시되었으나, 비교적 완만한 인하경로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금리의 하락 폭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어 시장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던 바 있으며, 시장의 2025년 말 기준금리 예측 수준인 2.5~2.75%를 고려할 때,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2.8%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우리경제의 하방위험과 정책시사점

우리 경제는 2025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양한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완화되면서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되겠으나 누적된 부채 수준 등으로 인하여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투자도 수주부진 등으로 둔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미국의 보편적 관세 도입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될 경우, 최근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차기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및 중동에 대한 정책방향 변화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위험회피심리 증대에 따른 자본유출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하방위험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의 물가 안정 추이 및 내수 부진의 장기화 우려 등 국내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금리인하에 따르는 부채 증가 및 주택시장 과열 등 금융 불균형 위험과 미국 차기정부의 정책방향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대외여건을 보아가며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 문제는 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정책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금융정책은 DSR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통해 과잉부채 등의 금융불균형 위험을 통제하고,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외환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집중하여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정책은 건전 재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점검,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정책 집행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내부적으로는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험 확대, 보호무역 대두 및 세계 경제 분절화 현상 등은 생산비용 상승 및 공급망 차질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인 총수요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 노동생산성 향상, 산업 경쟁력 증대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재정, 금융,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여 장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조합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KIF**